

한반도 안보위협과 한미관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고려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보수정권은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오바마의 민주당과는 물론 통상적인 공화당 정부의 정책과도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를 동반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근본적인 틀의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정책이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부상을 막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데서 출발한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처를 시사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대결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한 대미 위협에 강력한 대처를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신고립주의정책에 대한 지향에서 선회하여 미국 제일주의 원칙에 근거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의 강구와 같은 적극적 대응을 추구하는 것이 한반도의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미국은 동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미관계에서 주요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과정에 한미관계에서 풀어야 하는 과제가 상당히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하는 포괄적 제재조치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동의 보조를 취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사드 배치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이른바 킬체인 완성, 핵잠수함 건조와 같은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소녀상 문제를 포함한 위안부 문제와 같은 한일 간 현안의 해결을 통한 한미일 공동보조가 필요하다.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정책
3.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4. 결론: 미국의 대동아시아 및 대북 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
 - 가. 한미동맹의 효율적인 작동과 한반도 비핵화, 정확히는 북한 핵포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풀어야 할 과제

*America First*를
내세우면서
미국 국민의 물리적
안보와 경제적 부응에
중점을 두고 해외에서
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하지만
분쟁이 시작되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Jacksonian*의 입장

1. 들어가는 말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격변이 예고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함
 -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려 한다는 정책지향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더 이상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명확함
 - 초기에는 트럼프의 정책지향이 국내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는데 치중하고 해외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추종하는 Hamiltonian의 시각에 부정적인 Jeffersonian의 입장을 취함
 - 당선 이후에는 America First를 내세우면서 미국 국민의 물리적 안보와 경제적 부응에 중점을 두고 해외에서 분쟁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하지만 분쟁이 시작되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Jacksonian의 입장을 통해 레이건과 부시 Jr.의 전통적 공화당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보임
- 현실주의 시각에 입각한 Jacksonian의 입장에 따르면 미국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세계적 경찰국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 트럼프의 populist적인 대외정책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populism 대통령이었던 Andrew Jackson의 사고체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의 이익을 좁은 의미에서 규정하여 미국이 대외정책에서 역할을 축소할수록 비용과 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간주
 - 군사적 개입주의에 반대하고 군사비 지출을 축소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절약한 자원을 국내 문제에 활용하는 것을 선호
 - 미국 예외주의(exceptionalism)는 미국적 사고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것이나 세계의 변혁을 위한 미국만의 유일한 사명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미국 시민 개인의 평등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헌신을 더 중요시 함
- 미국의 대외정책의 근본적인 틀에 있어서의 변화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와 자유무역을 주장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부상을 막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출발
 - 오바마의 민주당 행정부 아래에서는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 그리고 아시아로의 회귀에서 재균형(Rebalancing)으로 명칭변경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변화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호주에 대한 아웃소싱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

- 2015년 중국은 6천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반면, 미국은 5천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지 못함
 -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한국과 일본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중국의 값싼 소비재의 수입으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붕괴하고 산업 공동화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은 물론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도 무차별적인 무역전쟁을 선포
-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통한 대미 위협외교로 인해 세계적 차원의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시사
-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가하는 반면에 정치 및 군사 안보분야의 협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영토분쟁, 군비경쟁, 역사갈등,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같은 위협요소가 증가한다는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군사 안보의 위기와 경제적 갈등이 동시에 증가
 - 미국 시민 개인의 평등과 존엄성을 보장,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화 같은 가치의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국의 팽창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임
 -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중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 중국을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국가로 규정,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의 확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의 마련 등이 이를 대변
-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본질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외교정책의 틀에 기초하여 동아시아와 대북한 정책 변화의 방향을 논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안보의 위협요인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대외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건 행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이 주도한 미국 일방주의와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중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
중국을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국가로 규정,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의 확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의
마련 등이 이를 대변*

2.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정책

-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의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주요인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
- 러시아 스캔들로 사임한 마이클 플로인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은 동아시아 특히

트럼프의**동아시아 정책은****전임정부와 비교해서****본질적으로****극적인 변화가****기본적인 변수는****아니며****미국의 경제적 이익의****극대화를 우선 추구**

- 대중 및 대북 정책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지향
- 마이클 플라너 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은 군 출신이고 폼페오 국장도 육사 출신이며, 국토안보부 장관을 거쳐 백안관 비서실장으로 있는 존 켈리도 해병대 장성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외정책에서 군사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힐러슨 국무장관은 동맹을 강화하고 공통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며 미국의 힘과 안보 주권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동맹을 중시하는 원칙을 강조하고, 매티스 국방장관은 아태지역의 동맹을 지지하고 역내 주둔 미군 확대를 주장

- 트럼프의 동아시아 정책은 전임정부와 비교해서 본질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기본적인 변수는 아니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우선 추구
 -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이 군사안보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철회를 천명했지만—이미 트럼프가 당선되자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비준요구를 포기한 상태였으나—동남아 국가의 중요성에 따라 TPP에 대해 다시 유보적 입장으로 선회
 - 중국의 경제성장이 미국의 정책적 불이익 위에 가능했다고 보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투명한 경제적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함
 - 미국 국민의 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미국 공장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이미 중국 등지에 공장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세제 혜택을 제공
 - 미국의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15%로 낮추고 수입물품에 대한 국경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에 대한 세금 우대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추구
-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은 초기에 중국과 통상 문제에 협상력의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경제중심 접근에서 강경한 방향으로 선회
 - 중국에 대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 역할 요구,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전통적 동맹유지와 함께 군사비 분담요구를 통해 전임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에 변화를 예고
 - 남·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확장정책에 대해서 미 항모전단을 파견하는 등의 군사적 강경대응이 경제적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렛대에서 적극적인 견제로 전환
 - 대중국 통상정책에 대한 협상의 지렛대로는 중국의 핵심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티베트, 신장위구르 자치구, 홍콩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만에 대한 접근 정책과 하나의 중국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활용

- 브루킹스연구소의 비상주 선임연구원인 에반스 리비어는 2016년 12월 미 외교정책위원회(NCAFP) 주최 회의에서 미국은 “미국의 공언을 이행하라는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확대억제(extended deterrence)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영국과 호주 등을 참여시키는 군사훈련의 규모와 빈도의 확대를 추진
-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 과정에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
 - 취임 초 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문제제기나 남중국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군사 활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강경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시아로의 회귀정책과 일관된 양상임
 - 남중국해에 미국은 항공모함 칼빈슨 호를 포함하는 항모전단을 파견하여 일본의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주둔시키고 인도-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양자동맹에 근거한 군사훈련을 통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견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중국의 확장정책에 대해 강경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청문회에서부터 미국은 중국이 분쟁 수역의 섬에서의 건설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차원에서 미중 간의 대결을 전망하면서 분쟁수역에서 중국의 건설행위를 불법으로 선언하면서 첫째, 섬에 건설을 중단하고, 둘째, 도서에 대한 접근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 한반도의 사드(THAAD) 배치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라는 신냉전의 출현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군사적 대응전략
 - 표면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위에 정당성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사드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같은 대남공격을 억제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한미 및 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봉쇄전략의 주축으로 활용
 -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는 한반도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들어가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을 무력화 시키는 효과
 - 사드 시스템의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는 2,000~3,000km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자산이 노출되는 감시능력을 미국이 확보하는 것에 대한 우려 확산
 -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군사동맹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정책의지의 반영으로 해석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 과정에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

미국이 세계경찰로서**활동하는 비용은****상당하지만****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미국의 국익은 비용을****상쇄하고도 충분히****남을 만큼 중요한****전략적 가치가****있다는 쪽으로 선회**

- 미국은 중국이 북한 핵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전면 시행 등 더 강력한 압박카드를 준비
 - 중국 2위의 통신장비 기업인 ZTE가 이란 회사 및 정부기업에 수익 달리 통제품목을 수출하고 북한에 283차례 통제품목을 수출했던 것을 문제 삼아 1조 3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를 통해 고강도의 대북 및 대중 압박을 개시
 - 중국 스마트폰 제조회사인 화웨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추가로 처벌대상 기업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북한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외국 기업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전면 시행 카드가 남아 있음을 예고하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핵을 해결하도록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3.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 후보자의 대한반도 정책은 전통적인 Jacksonian의 입장에서 미국의 역할과 비용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당선 이후 입장 전환
 - 한국의 안보무임승차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주한미군의 주둔비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는 방안과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던 강경입장에서 선회
 -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던 불개입주의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전임 오바마 정부가 수행했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와 미군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의지를 재확인
 - 대통령 후보자였던 트럼프의 입장은 비용에 비해서 이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미국의 외교정책을 책임지는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서 미국이 세계경찰로서 활동하는 비용은 상당하지만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미국의 국익은 비용을 상쇄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쪽으로 선회
-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북핵 문제를 놓고 “대화할 것이며 대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발언이 북한의 핵보유국을 용인하는 꼴을 낳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자 이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할 의사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
 - 그로부터 한 달 후, 트럼프는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만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회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핵협상을

하겠다고 회의의 형식까지 언급했지만 대화가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일관되지 않은 입장표명이 이어짐

-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설명 중 보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가능성은 10~20% 정도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제시
 -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2000년 미국 대선에 처음 출마했던 당시에 북한의 영변 핵원자로에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을 주장했던 경력을 소개하고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건 쉽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내가 원자로를 폭격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묻고는 “완전히 맞다(You’re damned right)”고 대답하면서 강경대응의 가능성을 분명히 함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의 동맹국과의 안보협력 문제도 안보비용의 부담이라는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논의
-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 후보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방위비 100%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고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제시했는데 이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취지
 -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기존의 이러한 입장에 어느 정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하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주한 미군의 주둔비용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의 군대와 경찰역할을 맡을 수 없으며 미국이 다른 나라의 군사지출에 몇 배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미국이 아니라 그들 나라의 방어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에는 수정이 나타날 것
- 북한은 2017년에 들어서 6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실험을 지속하고 6차 핵실험을 수소폭탄 실험의 성공으로 선언하는 등 핵 국가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 북한은 사거리 1만km 이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2형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여 미국을 위협
 - 북한은 5월 14일 새로 개발한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사실을 보면 대륙간탄도탄의 기술적 진전이 있고 미국본토를 타격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결론
 - 북한은 한국의 대통령선거 직전인 5월 6일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5월 22일에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2017년에 들어서
6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실험을
지속하고
6차 핵실험을
수소폭탄 실험의
성공으로 선언하는 등
핵 국가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북한의 ICBM은
미국에게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동아시아의 질서
자체에 대한
변화를 통해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정책은
혼선을 보여줌**

- 북한은 9월 3일 함경북도 풍계리 일대에서 6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발표하였고 실제로 5.7 규모의 인공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짐
- 북한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탄 발사 실험을 통해 미국을 직접 겨냥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시도
 - 7월 14일 국방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은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 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한국과 미국의 대응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재기하며 평가 절하
 - 7월 28일 밤 11시에는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 미사일은 지난 4일 첫 발사에 성공했던 ‘화성-14형’이라 주장하고 2차 발사 시험도 성공적인 것으로 발표하면서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사거리가 1만Km라는 점에서 미국의 동부까지도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 평가
- 북한의 ICBM은 미국에게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동아시아의 질서 자체에 대한 변화를 통해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정책은 혼선을 보여줌
 -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기다리지 않고 미국 주도의 대북한 제재조치를 주장하면서 7월 28일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
 - 군사적 조치의 실질적 사용을 통한 참수작전과 북한의 정권교체와 같은 극단적 조치에 대한 언급과 함께 북한 정권에 안보화약을 제공하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김정은 정권을 핵 협상으로 끌어내려는 상충된 시도를 표명
 - 북한의 잇따른 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을 둘러싸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대북 강경 대응론이 나오는 한편, 힐러슨 국무장관은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해결을 주장
 - 이와 동시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전해 강경대응과 대화 메시지가 동시에 나오면서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
-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대응 기류 확산
 -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핵실험, 스커드 미사일뿐 아니라 노동 및 대포동 미사일 실험을 통해 사거리를 연장하고, SLBM 실험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미국본토를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군사 위협을 제기

- 북한이 미 본토의 서부 해안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공공연한 위협에 대해 미국의 외교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I)’는 2007년 1월 “동북아시아와 미 서부 해안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예방하는 유일한 길은 힘의 사용이라고 믿는 워싱턴 외교가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임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2월 27일 지역방송 기자들과 가진 만찬에서 “북한은 세계에 위협이다. 북한은 세계의 문제다”면서 “북한은 곧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방송(WCPO)은 보도
 - 2017년 8월에는 북한 전략군이 태평양 괌 미군 기지를 화성-12형 미사일로 포위사격하겠다는 군사적 위협을 발표함에 따라 군사적 충돌의 위기가 확대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최근의 사태 전개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인식과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의 필요성을 고착시키는 경향으로 진행
- 북한이 2월과 3월에 이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되는 등 북한의 모험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대북정책을 검토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정신 상태에 의심을 보이면서 북한의 위협을 타개하는 걸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고위 정부 관계자가 밝힘
 - 대북 군사 대응 가능성이 커지면 이웃국가들과 군사적 대립의 여파를 우려하는 중국은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전망
 - 북한의 지난 7월 4일 화성-14형으로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7~8천킬로미터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면 미국본토의 서부연안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미국을 직접 위협
-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구체적 대안을 직접 고려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
- 백악관의 대북 정책 검토(policy review)에 ‘군사공격(military strike)’이나 ‘레짐 체인지(체제 교체)’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짐
 - WSJ은 약 2주 전에 캐슬린 F. 맥파랜드 국가안보(NSC) 부보좌관이 국가안보관리들을 소집해 대북 정책을 제안하라고 지시했고, 대북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북한 핵보유국 인정부터 군사조치까지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지의 표명
 -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사설에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의
대북 정책 검토
(policy review)에
‘군사공격(military
strike)’이나
‘레짐 체인지(체제
교체)’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짐**

선제타격이라는 초강경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몇 년 전에 이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보도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선제적

군사 공격을 언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

-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선제적 군사 공격을 언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은 물론 일본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뉴욕 타임스의 분석)
 - 미사일 발사를 멈추기 위한 단일의 공격은 선제공격이 아니라 방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한 번의 공격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전시에 북한이 이동식 발사장치를 사용하므로 사전 공격의 효력은 무력한 반면 북한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소용없는 상황
 - 북한의 무기고를 마비시키기 위한 일련의 사이버 공격은 일시적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고 포기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은 자체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마비를 극복하고 작동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북한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전면전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 2003년 이라크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에 대한 전쟁선포는 북한으로 하여금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수백만의 사상자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에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언급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전략적 인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탄 발사와 6차 핵실험 이후 군사적 옵션과 구체적 제재를 병행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미국은 북한이 의지하는 중국 당국을 압박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탄두와 미사일 개발을 스스로 포기하는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함
 -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은 북미 간에 대화를 고려하기 전에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불법적인 핵무기를 통한 위협을 중단하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조치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
 -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5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정상회담 의사를 밝히면서 북한 체제 유지를 보장하는 4가지 카드를 중국을 통해 전달했다고 전해지며, 그 핵심 내용은 미국이 추진했던 북한 정권교체, 김정은 체제 전복, 남북통일 가속, 미군의 북진 등 적대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내용
 -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탄 발사와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가 현실적 대안임을 강조하는 한편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대북한 직접압박과 중국을 통한 실효성 있는 경제제재를 추진

-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한계는 한반도가 가지는 지정학적 및 국제정치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실상 군사적 선택이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적 한계
- 한국은 탄핵국면으로 정상외교가 사실상 6개월간 중단되었다가 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와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에 관한 공조를 확인하는 적극적 행보를 보임
 -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양국 정상은 동의하고 한미동맹은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점을 들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이며 한미동맹을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언급
 - 총론적인 부분에서 안보에 대한 여론의 우려는 불식되었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이후 사드배치, 사드비용의 부담, 한미 FTA 재협상과 같은 세부안건에 있어서는 양국 간에 이견이 희석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짐
-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FTA의 재협상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해 경제적 위협
 - 후보시절부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해온 트럼프는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2011년 132억 달러에서 2016년 276억 달러로 증가해 한미 FTA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대응을 천명
 -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산 철강과 화학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나 실제로는 미국 내 산업계의 반대에 직면
 -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 완제품 수입물량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해 왔지만 미국 내 기업은 원가상승 등의 이유로 이에 반대하기 때문에 FTA 재협상에서 과도한 관세부과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의 신고립주의 정책에 대한 지향에서 선회하여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 원칙에 따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

**후보시절부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해온 트럼프는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2011년 132억 달러에서
2016년 276억 달러로
증가해 한미 FTA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대응을 천명**

미국은 북한의 핵 타격 능력의 확대에 따라 비핵화를 위해 참수작전과 외과수술적 군사조치를 통한 레짐 체인지에서부터 평화협정과 정상회담 그리고 국교정상화의 평화적 접근까지 모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행보를 시사

- 미국은 북한의 핵 타격 능력의 확대에 따라 비핵화를 위해 참수작전과 외과수술적 군사조치를 통한 레짐 체인지에서부터 평화협정과 정상회담 그리고 국교정상화의 평화적 접근까지 모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 중국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요청하면서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의 독자적 행보도 추진할 것을 시사하면서 미국이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포함된 ‘세컨더리 보이콧’과 ‘주요 자금세탁 우려국’ 등을 근거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경제제재를 적극 검토
 - 북한의 태양절에 맞춰 6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에 따라 미국은 칼빈슨 항모전단을 한반도로 배치하고 미 국방부는 5월 30일 태평양 마셜군도 과갈레인 환초에서 발사된 모의 ICBM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이 격추하는 실험에 성공
-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지만 한반도의 전쟁을 피해야 하는 한반도 평화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방안으로 북한의 태도전환을 추구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사드 배치에 대한 재고 또는 원점에서 재검토의 입장을 유지했고 다른 후보로부터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에 대한 논쟁에서 안보 문제를 통한 사상검증을 경험했지만 6차 핵실험 이후 안보의 중요성을 이유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함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의 진전을 내세우면서 대북강경정책을 유지하면서 중국에 대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금융기관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극 추진
 -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유효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10년간 북한을 고립시키는 강경정책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시킨 반면 노무현 정부시절 북한은 핵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발한 적도 있음에 주목
- 미국 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철수를 전제로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지만 소수의 목소리
- 미국의 정책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토드 로즌블룸 연구원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중국이 움직이도록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 대가로 중국은 대북지원 중단과 김정은 정권 붕괴를 이끌어

북한을 한국에 흡수 통일시키자는 구상

- 지난 25년간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 및 통일정책 구상을 발표
- 이러한 주장이 새로운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의 흡수통일 과정에 미·중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미·중 및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재건하는 데 드는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은 한국의 자주권에 대한 문제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가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4. 결론: 미국의 대동아시아 및 대북 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

-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 전략적 인내라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동안 북한은 체제생존을 위해 주변국의 애매한 입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핵무기의 소형화와 기술발전 그리고 발사체의 개발에 성공
-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조치를 추구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함
- 북한이 ICBM 발사 성공과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공공연히 표방하는 지금에 와서는 미국도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오바마 시기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사실상의 방치를 마무리하고 적극적인 대응
-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던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으로 미국의 요구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
- 이런 새로운 국면에 한국은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전술핵 도입이나 독자 핵무기개발과 같은 정책이나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조건에서 한반도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성급한 정책결정보다는 한미공조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정책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대응전략의 마련이 필요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던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으로
미국의 요구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

가. 한미동맹의 효율적인 작동과 한반도 비핵화, 정확히는 북한 핵포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풀어야 할 과제

- 북핵 해결에 한·미공조 체제의 효과적인 가동은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개발과**미사일 위협이****현실적으로****나타날수록****한미동맹에 대한****한국의 의존은 보다****현실적인 대안으로****부상**

- 신뢰의 문제로 보다 긴밀한 정책조율이 요구되고 있음
-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하고 한국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북한에 대한 한미의 정책공조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
-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강경조치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확장정책에 대한 대응에의 유화적인 입장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핵폐기에 대한 북한의 행동이 우선되어야 대화를 재개한다며 압박과 제재를 지속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제재의 병행노선과 불일치를 보임
- 북한은 유엔제재가 지속되는 강경국면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에 대해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결정은 국내에서 부정적 여론이 다수 존재할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설득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에 난제로 보임

-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적으로 나타날수록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의존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
 - 한국의 국내정치적 불안 속에도 사드(THAAD) 배치는 북한에 대한 방어를 제공하며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미동맹의 핵심 연결고리로 인식
 - 북한의 핵개발 등 한반도 안보위협이 드러날 때마다 미국은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B-52전략 폭격기와 원자력 잠수함을 한반도 인근으로 파견하여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임
 - 한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핵보복을 결정하는데 결정의 주체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고 미국의 핵보복 결정은 한국의 이해가 아니라 미국의 이해에 따라 결정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 맞춰서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의 정도를 줄여나가고 전시작전권 전환의 시점을 재조정하는 노력이 필요
- 한미동맹의 신뢰와 관련하여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전환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이 필요
 -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시절이던 2006년 노무현-부시 정상회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7년 2월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자로 전환에 합의
 -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연기론을 주장, 2010년

6월 이명박-오바마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자로서 2012년 당시에는 계획대로 전환을 공약했지만 2013년 정상회담 이후 이상기류가 감지되면서 2013년 7월 전작권 재연기를 제안했고 7월 23일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공약으로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핵에 대한 초전 대비가 가능한 킬체인을 앞 당기겠다”며 “독자적 대북 핵심전력을 조기에 구축하면 임기 내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
- 북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서 미국의 역할과 한일관계의 고질적인 역사 및 영토 문제에 대한 한국 국내여론의 부정적 시각의 해소가 필요
 -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부터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증진에 핵심고리인 한일관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과 위안부협정을 추진하도록 요청했고 박근혜 정부시절 상당한 결실을 보임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경우 한국 정부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권한이 전적으로 일본에 부여되어 있고 보안감사와 같은 사후조치를 취할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독소조항이라 하여 국내 여론의 반대가 비등
 -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합의에 있어서도 일본은 2015년 12월 28일 합의에 대해 국가 간 합의를 존중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은 한국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고 조현 외교부 차관은 위안부 합의는 대단히 잘못된 합의라고 밝힘
 - 한일관계 균열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추가건립과 관련, 일본은 대사소환, 통화스왑 중단,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로 대응하면서 한일관계는 냉각기를 거치고 있어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가 어려운 국면
- 사드 배치에 따른 한국 국내에서 발생하는 안보불안 요인의 가중과 정치적 갈등의 해소가 요구되는 상황
 - 초기에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과정에 한중관계의 외교적 마찰과 함께 사드 배치에 따른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 부담의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으나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
 -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전부터 한국과 같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흑자를

**북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서
미국의 역할과
한일관계의
고질적인 역사 및
영토 문제에 대한
한국 국내여론의
부정적 시각의
해소가 필요**

트럼프 대통령은**한·미 FTA를****불공정 협정으로****규정하고 재협상을****통해 무역적자를****해소하겠다고 공언한****상태에서 안보 문제에****따라 우선순위가****밀려 있기는 하지만****향후 한미관계의****주요 이슈로****남아 있음**

연는 국가의 방위비를 미국이 부담하는 문제를 미국의 희생으로 지적 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동맹의 의무’ 차원에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를 우회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한 관행을 문재인 정부가 비판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침을 발표하자 박근혜 정부 시기 한미가 합의한 연내 사드 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면서 매티스 장관은 “사드의 한국 배치는 실질적 문제”로 규정하고 배치 철회는 없다는 점을 확인

-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배치를 지시함으로써 한미 간의 갈등은 봉합되었으나 국내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불공정 협정으로 규정하고 재협상을 통해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안보 문제에 따라 우선순위가 밀려있기는 하지만 향후 한미관계의 주요 이슈로 남아 있음

- 트럼프는 4월 27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끔찍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협정”으로 규정한 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끝나는 대로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겠다고 공언

- 한미 FTA 재협상이 미국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수출 손실이 최대 169억 9,300만 달러 그리고 일자리 손실이 15만 4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국내 경제의 손실이 예상

-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하였지만 한국의 입장은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며 정말 미국만 손해를 보는지 분석을 먼저 하자는 입장

-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1순위로 언급하던 철강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 조치는 당분간 보류한다는 취지로 답한 배경에는 자동차 산업 등 미국 내 수입산 철강제품 사용업체의 반대와 유럽연합(EU) 등 상대국의 보복조치 가능성이 영향

-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회의장 선정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간에는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산업계에서는 한·미 FTA의 재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만큼 재협상은 소강상태를 맞고 있음

❖ 저자 약력

■ 이성우

現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공공분쟁 사례연구”를 주제로 대한민국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학술활동으로는 미국 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분쟁해결연구부장)

편집: 황지나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